

“금호타이어 매각 끝까지 저지”

전남 운송업계 “해외 부실 매각 문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광주경총 “정부, 공적자금 투입 방산기술 보유 기업 지켜내야”

전남지역 운송업계와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6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금호타이어 해외 부실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전남운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전남개인트럭운송사업조합·전남택시운송사업조합·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전남개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5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불공정한 매각 절차와 불합리한 매각 조건을 강요하며 호남 지역민들로부터 금호타이어를 빼앗고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지역 운송업계는 지역경제를 대표해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 매각을 결사반대 한다”며 “산업은행의 부실 매각 중단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반약 정부의 무관심과 산업은행의 부실매각으로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넘어갈 경우, 지난 57년간 이룬 금호타이어의 모든 자산과 기술을 송두리째 중국에 넘겨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의 매출액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더블스타가 인수할 경우 과도한 차입과 브랜드 저하로 인해 과거 쌍용차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막대한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자리 추경안 이 국회 통과되고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도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이제는 정부가 호남지역 최대 현안인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 이상 금호타이어 문제를 산업은행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추진 중인 해외 부실 매각을 즉각 중단 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호남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며 “현재 금호타이어 임직원 전체와 지자체, 사회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금호타이어 더블스타 매각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운송업계도 앞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매각 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항포기업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광주경총은 “지역 경제계에서 ‘금호타이어 매각 재입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광주시와 광산구, 곡성군 등은 물론이고 정치권, 지역시민단체, 심지어 광주전남총화

생협의회 등 지역 곳곳에서 한 목소리로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역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이들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동인 금호타이어가 해외에 매각될 경우 정규직 5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광주와 곡성공장은 모두 점차 축소되거나 폐쇄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호산업이 보유한 ‘금호’ 상표권을 무단으로 임의 보

장해 상표권 논란을 부추긴 산업은행은 각성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국 기업을 지켜낸 일본의 도시바 반도체 매각 사례를 참고해 우리 정치권과 정부도 첨단 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가 해외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금호타이어를 지켜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로 매각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매각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남규 기자



참을 수 없는 허풍 26일 오전 부산 동래구 총렬사 인력서원에서 열린 여름방학 초등학생 전통문화 체험교실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사자소학을 배우며 허풍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해외연수 업체 직원들과 ‘동행’ 논란

최근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심을 외면한 채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았던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당시 전남도의 공사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들과 동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22일부터 30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등을 다녀왔다.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자연형 하천조성과 재난대응 정책에 대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한다는 명분으로 4800여만 원의 예산이 소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에는 7명의 의원과 의회사무처장, 전남도·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 13명이 참가했다. 당시 전례없는 가뭄이 지속한 데

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남도 공무원 등이 동행해 논란이 일었다. 일정보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시드너타워, 맥케리공원, 오페라하우스, 레드우드 수목원, 아그로폴 농장 등 상당수 관광성으로 짜였다.

한때 최근 확인결과 당시 해외연수에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업체 직원 2명이 동행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전남도 하천 공사의 설계 등의 용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D사는 부정급, W사는 이사급이 연수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 연수에 전남도와 관련된 업체 직원이 동행한 것은 이례적으로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연수 참가자는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자연형 하천조성 과정을 벤치마킹 한다는 취지에서 하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했다. 해당 업체는 전남도 하천 관련 용역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참가자는 “그동안 하천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 선진지 하천 정비와 생태하천을 보기 위해 익산청과 전남도, 설계회사와 같이 연수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수보고서에는 전문가라고 대동한 업체 직원 2명의 명단이 올라 있지 않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덧붙였다면 공식 연수보고서 명단에 올라야 하나, 찾아 볼 수 없다. 더욱이 전남도의 공사용역을 맡은 업체 관련 도와 도정을 견제, 감시해야 할 도의원들에게는 ‘갑’ 입장일 수 있어 여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중국, 칭하이성에 화성 모의기지 건설 착수

2020년 첫 화성 탐사선 발사를 목표로 한 중국이 서부 칭하이성에 ‘화성모의기지(화성촌)’ 건설에 착수했다.

25일 중국 신원왕 등은 첫 화성모의기지 신설 프로젝트 계약 체결식이 칭하이성 하이시(海西) 몽골·장족자치주(하이시주)에서 열렸고, 이는 사실상 기지 건설 개시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기지가 세워질 하이시주 다차이(大柴旦) 홍야(紅崖) 지역은 대표적인 ‘이르타(건조한 지역의 풍식지형 일종)’ 지형을 갖췄고 지세와 지모(地貌) 등 측면에서 화성 표면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과학·환상·자연·생태·문화의 융합’을 주제로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기지는 또 기능에 따라 ‘화성 캠프’, ‘화성 단지’ 2부분으로 구성된다.

다만 중국 언론들은 기지의 구체적인 차공, 완공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과학원 달·우주탐사본부 류샤오원 주임은 “해당 기지는 첫 화성탐사선 주제를 한 기지로, 국민들에게 고급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울러 천문, 항공, 지리, 신에너지 분야 교육 및 체험 기지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30년에는 첨단 우주산업과 우주 인프라를 갖춘 ‘우주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련의 우주개발 계획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첫 화성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혐의’ 펠 추기경 첫 법원 출석

간간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티칸 서열 3위의 성직자 조지 펠(76) 추기경이 자신의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호주 멜버른 치안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작은 법정에 입장한 펠 추기경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았다. 펠 추기경의 뒤에는 법조팀과 그를 지지하는 몇몇 지방교구의 신도들도 앉았다. 그들은 펠 추기경에 작은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펠 추기경은 간단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로 행정적인 문제들이 다뤄졌다.

펠 추기경의 변호사 로버트 리터는 “펠 추기경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나 역시 그가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리는 몇분간 계속됐고 매우 일상적이었다. 법원 밖에서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에 입장하는 펠 추기경을 보기 위해 애쓰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법원 밖에서 펠 추기경을 기다리던 한 시민은 “우리는 사실을 듣고 싶다”며 “그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강보에 쌓인 아기예수를 성모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림을 들고 있던 여성은 “아이들에게 저질렀던 범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펠 추기경이 법원을 나오자 빅토리아 주 경찰관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에워싸고, 취재 중인 기자들과 지지자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한 여성은 “우리는 펠 추기경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고, 다른 한 편에서는 “당신은 아이들을 보호했어야 했다”고 소리쳤다.

라오스 코끼리 수십마리 中에 불법으로 팔려

라오스 코끼리 수십마리가 중국에 불법거래되고 있었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은 동물원과 사파리공원에 비싸게 되팔기 위해 코끼리 수십마리를 라오스로부터 불법적으로 구입했다.

이러한 사실은 야생동물 조사관이자 영화감독인 칼 이빈에 의해 드러났다. 이빈에 따르면 라오스와 중국 국경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끼리들은 가격은 약 2만3000파운드(약 3354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코끼리들은 중국의 수용시설로 이동된 후 최고 23만파운드(약 3억3339만원)에 다시 팔렸다.

이빈과 그의 일행은 올해 초 라오스에서 두바이의 사파리 공원으로 가는 16마리의 코끼리 거래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라오스와 중국의 불법거래를 발견했다. 16마리의 코끼리 중 정식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코끼리는 한 마리도 없었다.

거래는 코끼리들이 두바이로 떠나기 직전 톤톤 시슬릿 라오스 총리의 명령에 의해 중단됐다.

이빈은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코끼리들의 배경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코끼리 거래의 대리인 뿐 아니라 소유주도 만났다”며 “라오스 코끼리 거래가 주로 중국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약 10마리의 종착지는 중국의 동물원이나 수용시설이었다”고 설명했다.

큰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